

정후식칼럼



논설실장·이사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검찰·경찰·국정원 등 국가 권력기관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이후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열망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했다.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자 함이었다.

하지만 ‘검찰 개혁’에는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법무부와 검찰,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세력 간 극심한 진영 대립이 펼쳐졌고 국론 분열이 심화됐다. 끝없는 갈등에 개혁의 대의는 빛이 바랬고, 코로나 사태로 시름겨운 국민의 피로감은 더욱 심해졌다.

그럼에도 아주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1월 공수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또한 공수처법·경찰법·국정원법 개정안도 지난해 말 잇따라 국회의 문턱을 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

이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령들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점이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기소는 물론 영장청구 권한까지 모두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는데, 이 중 수사권을 경찰과 나누도록 한 것이다. 검찰

닷 올린 ‘권력기관 개혁’

의 직접 수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로 한정됐고, 나머지 범죄에 대한 수사는 모두 경찰이 맡게 됐다.

이와 함께 공수처가 지난달 21일 공식 출범하면서 검찰의 기소독점권도 분산됐다. 공수처가 전·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판검사 등 3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고,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게 되면서 검찰의 독점 체제가 허물어진 것이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영장심의위원회’ 제도도 새로 마련됐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 광주고검 등 각 고등검찰청 산하에 구성된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 조직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 등 세 개의 지휘·감독 체계로 분리되면서 ‘한 지붕 세 가족’이 되는 것이다. 기존에 전권을 행사했던 경찰청장은 보안·외사·경비 등 국가경찰 사무만 관장한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산하 합의회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끄는 구조다.

자치경찰제도 도는 7월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는 생활 안전과 교통·경비 그리고 학교 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 수사 등이다. 이에 대비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컨트론타워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기소권이 명문화된 것이 1954년이었으니, 형사사법 체계의 이러한 전환은 거의 70년 만의 대전환이라 할 만하다. 변화의 폭도 크고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수사 속도가 빨라져 시민의 불편이 줄어 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례가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반면 ‘정인이 사건’ 등에서

보듯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한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자치경찰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치안 행정과 지방 행정을 연계해 지방 분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국가직이고 조직·인원·예산도 사실상 그대로이다 보니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견제 약화나 유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중립성·공정성으로 정의 구현을

우리는 사회의 갈등 현장에서 흔히 ‘법대로 하자’라는 말을 듣는다. 흥미로운 건 ‘법대로’를 외치는 쪽이 약자보다 강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동안 법이 약자 보호보다 강자의 기득권을 지켜 주는 뒷배 역할을 해 온 탓일 게다. 법의식 조사에서도 여전히 국민의 80% 이상이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데 동의한다. 이러한 의식의 이면에는 검찰·경찰·법원 등이 법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시너 역할을 하거나 권한 오남용으로 인권 탄압과 차별을 일삼았던 흑역사가 자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권력기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개혁 대상으로 꼽혔지만, 그럴 때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조직을 앞세워 저항해 왔다. 하지만 저항이 아무리 거세도 권한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검경은 지휘와 복종의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의 수평적 관계로 전환됐다. 오랜 진통 끝에 개혁의 기반이 구축된 만큼 검찰과 경찰은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넘기는 방안까지 나오지만, 당분간은 갓 시행된 제도의 안정화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아울러 각 기관은 시민의 민주적 통제 속에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인권 존중과 정의 구현의 보루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야 할 것이다.

社說

국민의힘 ‘호남 동행’ 외치더니 헛구호였나

최근 국회를 어렵사리 통과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호남을 ‘제2 지역구’로 배정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기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자신들이 약속한 ‘호남 동행’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찬성 168표, 반대 75표, 기권 7표로 통과시켰다. 한데 이 법안이 광주의 최대 현안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의 후 6개월 동안 아시아문화재단 직원 고용 승계 등이 특혜라는 이유를 들며 반대를 일삼았다.

급기야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도 광주·전남에 제2 지역구를 둔 31명의 ‘호남 동행’ 국민의힘 의원 중 29명이 반대나 기권·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광주에 제2 지역구를 배정받은 장제원·하태경 의원 두 명뿐이었다. 전북 지역 ‘호남 동행’

의원 12명 중에서도 찬성은 유의동 의원 한 명뿐이었고 11명은 반대·기권·불참했다. 지난해 ‘5·18 왜곡 처벌법’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호남 동행’ 의원들의 협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는 지난해 9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5·18 묘역 무릎 사과’는 물론 ‘호남 동행 국회의원 발대식’까지 열며 호남의 현안과 예산을 적극 챙기겠다고 한 약속과는 전혀 판판이다. 그러나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전남 지역 현안 법안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특별법’에 대해서도 ‘현전의 적자’를 거론하며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법안은 한전공대의 원활한 개교를 위해 이달 중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여기에 여수사건 특별법 역시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이어서 조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이들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광주상의 회장 선거 둘러싼 반목 안 된다

광주 지역 경제계를 이끌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투표권 확보를 위한 회비 납부 과정에서 회원사 간 마찰이 빚어지는 등 회장 선출을 앞두고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회장 선거 과열 양상은 투표권 확보 과정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광주 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투표권(선거권)이 주어지는 회비 납부를 마감한 결과 365개 회원사가 총 4730표를 확보했다고 한다. 투표권은 특별회비 납부액에 따라 업체당 최대 50표까지 확보할 수 있으며, 100만 원 당 1표다.

이번 선거는 일반의원 80명과 특별의원 12명 등 총 92명의 의원을 선출한 뒤 이들 의원이 회장을 최종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데 회비 납부 마지막 날 추가 투표권이 주어지는 특별회비가 총 22억 원에 이르면 업체 매출에 따른 일

반 회비는 3억 원에 그쳤다. 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획득하기 위한 회원사 간 경쟁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결국 ‘돈 선거’가 재연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정 후보 지지를 놓고 회원사 간 갈등도 불거졌다. 선거권을 획득하기 위해 진행된 회비 납부 과정에서 며칠 전 마감 시간(오후 6시)을 놓고 자정이 다 되도록 각 후보 진영 간 극한 대립과 마찰이 벌어진 것이다.

지금도 광주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광주상의 회장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따라서 회장 선출을 놓고 지역 기업들이 분열과 반목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할 중요한 시기에 광주상의 회장은 결코 개인 명예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은펜칼럼



강대석 시인

삼월은 매화의 계절이다. 거친 나뭇가지 끝을 헤매던 칼바람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린다. 눈 속에서 피는 설중매다. 그리고 삼월이 되면 흥매, 백매, 청매 등 온갖 매화가 기다랗다는 듯 다다여 피어나 세상을 그윽한 매향으로 물들인다.

주말인 옛그제 섬진강 변 매화마을의 매화와 산정의 정당매를 보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나들이를 하였다. 한데 너무 성급했을까? 추웠던 날씨 탓인지 매화마을은 군데군데 흥매화와 이른 매화만 피어 있고 산정의 정당매도 조금 필 때 피어 모처럼 나선 코로나 속 탐매 여행은 아쉬움을 남겼다.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한국의 4대 매화는 강릉 오죽헌의 울곡매, 장성 백양사의 고불매, 순천 선암사의 선암매, 구례 화엄사의 화엄매 등이다. 4매 중 3매가 호남에 있다. 여기에 전남대의 대령매, 담양 지심마을의 계당매를 더하면 호남 5매가 된다. 매화는 모두 설가 아름답지만 그중에서도 백양사의 고불매는 더욱 아름답다. 백학봉의 하얀 압벽과 고색창연한 기와지붕

탐매(探梅) 여행

을 배경으로 핀 흥매의 자태는 그 이름처럼 신비의 멋을 더한다.

호남에 5매가 있다면 영남에는 산청 3매가 있다. 단속사의 정당매(강회백), 단성면 남사리의 원정매(하죽), 시천리의 남명매(조식)가 그것이다. 그중 단속사의 정당매는 유명하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화를 위해 지은 정당매각(政堂梅閣)이란 비각과 그 안에 두 개의 식재 기념비가 있다.

정당매는 고려 말 정당문학 겸 대사헌에 오른 강회백이 유년 시절 단속사에서 공부할 때 심었다. 후에 과거에 급제하여 정당문학에 오르자 이곳 승려들과 문인들이 강회백의 인품을 그리워하며 정당매라고 불렀다. 수령이 640년이 넘는 경남도의 보호수였으나 수년 전 원목은 수명을 다하고 후계목이 자라 3월 초에 꽃을 피운다. 황량한 옛 단속사의 절터에 삼층 석탑과 석간 등 유물이 남아 있어 폐망한 고려의 한이 서린 유서 깊은 곳이지만 최근 민가들이 속속 들어서며 주변이 많이 훼손되어 관리가 시급하다.

조선의 선비 중 매화를 가장 사랑했던 이는 퇴계 이황 선생이다. 선생은 눈을 감기 전 유언으로 ‘저 매화에 물을 주어야’라고 할 정도로 매화를 아꼈다. 선생이 지은 매화에 대한 시가 107수에 달하니 거의 ‘매화시선’(梅花詩仙)이라 불리도록 되었다. 선생이 이렇게 매화를 사랑한 데는 성품이 고매하여 본래 매화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기생 두향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 선생은 나이 48세에 단양군수를 제수받았다. 그때 만난 여인이 18

세의 관기 두향이였다. 두향은 세조 때 단종 복위 사건에 연루된 어느 사대부의 후손으로 양반가의 후예답게 시서화와 거문고에 능했다. 두향은 군수인 선생의 인품에 반해 일생의 스승으로 삼고 정성으로 모셨다. 그리고 9개월 후 선생이 풍기군수로 옮겨자 두향은 이별을 서러워하며 매화를 좋아하는 선생을 위해 수석과 매화본 하나를 행장 속에 넣어 보내며 시 한 수를 읊었다.

“이별이 하도 서러워 잔 들고 슬피 우니/ 어느덧 술 다하고 임마저 가는구나/ 잊고 지 새우는 봄날을 어이 할까 하노라!” 이별의 애절함이 묻어나는 한 여인의 독백 시였다.

퇴계는 두향이 보낸 매화본을 평생 곁에 두고 두향처럼 아끼며 가꾸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매화 몇 그루와 함께 도산서원에 심었다. 그 매화의 후계목이 도산매다.

선생이 풍기군수로 옮겨간 후 두향은 정절을 지키기 위해 남한강가에 움막을 짓고 선생을 그리워하며 홀로 살았다, 두 사람은 이별 후 한 번도 서로 만나지 못했다. 선생이 69세로 세상을 뜨자 소문을 들은 두향은 밤낮을 걸어서 안동까지 내려가 선생의 장례를 면발치에서 바라본 후 돌아가 남한강에 몸을 던졌다. 요즘 세상에는 상상도 못할 순애보의 주인공이자 정절의 표상이었다.

매화가 피는 계절이다. 올해는 늦기 전에 도산매를 보러 가야겠다.

기 고

‘김치’라는 이름 제대로 불릴 수 있도록

먼저 김치에는 양념이 있다. 한 번 절인 배추를 양념으로 버무리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맛을 만들어낸다. 비빔밥을 즐기는 우리의 식문화가 들어있는 것이다. 두 번째 차이는 국물이다. 김치는 국물까지 다 먹는 반면 파오차이는 국물을 먹지 않는다. 국물 맛을 즐기는 우리 동치미나 나박김치 역시 중국에는 없는 음식이다.

세 번째는 김치는 발효를 하면서 계속맛이 변한다는 것이다. 하루하루 익어가는 맛을 즐기고, 때로는 목을 지를 맛보려고 오래 기다리기도 한다. 반면 파오차이는 한 번 발효시킨 뒤 맛이 변하지 않는 것을 최고로 여긴다. 결국 이 둘은 전혀 다른 음식이다.

우리 역사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다. 1800년대 우리 양반들의 문집 ‘언문후생록’에는 ‘통배추 양념은 조개, 낙지, 소라, 생굴, 전복, 파, 마늘, 그리고 실고추까지 잘게 썰어 배춧잎 속에 겹겹이 넣고 갖을 양념으로 넣어 담았다.’ 지금의 김치 담그는 법과 크게 다르지 않

다. 또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중국 사신들이 오면 반드시 접대 음식으로 올렸고, 사신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선물로 달라고 해서 세 항아리를 보냈다는 기록이다. 중국의 음식이라면 선물로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중국은 왜 이렇게 김치에 매달리는 걸까? 김치의 세계화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 세계인들은 있는 그대로의 김치는 물론, 김치를 주스나 과자로 먹고, 육수나 파우더 형태의 양념으로도 소비한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 내수시장을 노리고 진출한 우리 업체들의 매출만 봐도 매년 10% 넘게 급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역지는 커져 가는 김치 산업에 대한 욕심과 동북아의 역사와 문화가 모두 중국에서 나왔다 중화사상이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김치가 중국에서 ‘한귀(한국) 파오차이’라는 이름 대신 고유명사인 ‘김치’라고 제대로 불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김치를 지키는 시작일 것이다.



박미경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중국에는 파오차이라는 음식이 있다. 우리로 치면 장아찌와 비슷하게 채소를 절인 것이다. 그런데 이 음식이 국제 표준 인증을 받은 이후 중국에서 김치의 원조는 중국이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언론까지 나서서 김치는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치와 파오차이가 얼마나 다른 음식인지 살펴보자. 우리 김치에는 있고 파오차이에 없는 것이 세 가지 있다.

無等鼓

‘미안바’는 우리에게 ‘바마’라는 국명으로 더 알려져 있다. 1983년 바마 아웅산 폭발 사건 영향 때문이다. 그해 10월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수행원들과 함께 바마 수도 랭군 아웅산 국립묘지 참배 일정이 잡혀 있었다. 한데 전 전 대통령이 도착하기 직전 폭발로 인해 장관 등 15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바마 정부는 북한의 테러로 결론짓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1989년 이전까지 ‘바마’였던 미안바는 1962년 군부 쿠데타 이후 그를 통해 미안바 시민 나라 이름을 변경했다. 바마라는 국가명이 영국식 미안바의 전체인 데다, 135개 소수민족을 아우르지 못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럼에도 민주화운동 활동가들은 군사 정권에서 불인 국명인 미안마와 현 국기를 거부하고 바마라는 호칭과 옛 국기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미안마에서는 군부 독재 시절에도 꾸준하게 민주화 시위가 있었고 이 과정에 ‘아웅산 수처’라는 국모(國母)가 있었다.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아웅산 수치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시력은 1988년에 이른바 ‘88항쟁’을 이끌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 희생 속에 군사정권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48년간 이어졌던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고 2010년부터 점차적으로 민간에 정권이 이양되는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지난해 미안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의 국민민주연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자, 군부는 다시 부정선거를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지금 미안마에서는 양공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연일 민주화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소셜미디어 해시태그를 통해 미안마 시민들의 절규가 널리 퍼지고 있다. ‘유엔이 행동하라’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필요한가요?’라는 문구다. 국제사회가 선포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 뉴스 영상을 통해 군경이 주변 동료들과 함께 깔깔대고 웃으며 시위대를 쫓는 장면이나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는 장면을 접하면서 마치 1980년 5월 광주를 보는 듯했다. 당시 광주처럼 철저히 고립된 미안마에 국제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때이다. /최원일 정치부 부장 cki@

<p>光州日報</p>	<p>The Kwangju Ilbo</p>
<p>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p>	
<p>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p>	<p>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p>
<p>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p>	
<p>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시 월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p>	<p>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p>
<p>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p>	<p>경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p>
<p>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p>	<p>전 남 본 부 220-0642 <FAX 02-773-9335></p>
<p>※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p>	
<p>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